

2025. 9. 30.(화) 보도시점 2025. 9. 30.(화) 배포
 협의회 시작(14:00) 이후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민관이 함께 생명을 지킵니다

- 민·관 43개 기관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9월 30일(화) 오후 2시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시 강남구)에서 「제8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8년 구성·운영된 협의체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 협의회에는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협력기관 37개 민간기관과 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중수 성균관장이다.

「제8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공동위원장인 유교 최중수 성균관장, 교육부 등의 정부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 분야별 대표 26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 보고,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와 민간기관 43개 기관은 함께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

1. 생명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2.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자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생명은 나와 타인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5. 우리는 모두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6. 사회와 개인은 생명을 지키는 모든 노력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7. 우리 모두는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보고하고, 자살사망자 수 5년 이내 1만 명 이하 달성, 10년 이내 OECD 자살률 1위 오명 극복이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종교계, 재계·노동계, 언론계, 학계, 협력기관이 수행 중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자살예방사업 실천 등 다각적 활동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오늘 채택한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실천한다면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전문)

<붙임2>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붙임3>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요약본)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정우 (044-202-3890)
	정신건강정책관	담당자	주무관 김혜진 (044-202-3898)
협력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책임자	사업운영본부장 이구상 (02-3706-0507)
		담당자	총괄협력사업부장 위준영 (02-3706-0530)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생명 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1. 생명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2.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자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생명은 나와 타인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5. 우리는 모두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6. 사회와 개인은 생명을 지키는 모든 노력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7. 우리 모두는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 소속된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정부

- 하나. 5년 내 자살사망자 수 1만 명 이하 달성과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 오명 극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둘. 고위험군 지원 확대, 취약계층 기관 연계, 위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 중심 안전망 확립, 근거 기반 과학적 정책 추진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셋.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 종교계

- 하나.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담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전파하겠습니다.
- 둘.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이웃을 발굴·지원하여 따뜻한 공동체 돌봄을 확산하겠습니다.
- 셋. 종교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3. 재계·노동계

- 하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둘. 직장 내 건강한 소통과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 셋. 경제적 위기와 실직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안전망 조성에 동참하겠습니다.

4. 언론계

- 하나.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확산하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 둘.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셋. 자살 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증진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학계

- 하나. 근거 기반의 연구와 전문적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둘. 청소년·청년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에 주도적으로 힘쓰겠습니다.
- 셋.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자살예방을 위한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6. 협력기관

- 하나. 다양한 분야 간의 전문적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둘. 각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명존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 국민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하고 소중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희망을 지키는 일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 길을 향해 정부와 민관이 함께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일동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의전화, 생명존중교육협의회,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유족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운영 개요

- (운영목적)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사업 발굴,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해 구성·운영('18~)
- (주요기능) 자살예방관련 홍보,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민간자원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 (구성) 정부·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학계·협력기관 총 43개 기관
 ※ 공동위원장 : (정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민간) 최중수 유교 성균관장

정부(6)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종교계(7)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노동계(2)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재계(2)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언론계(7)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학계(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협력기관(14)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존중교육협의회,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생명의전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유족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사업 추진절차

- (복지부) 협의회 운영 총괄 → (운영지원*) 협의회 운영 실무, 공동추진사업 운영 ↔ (협의회) 회의 참석 및 공동추진사업 참여

* 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지원(자살예방법 제12조의4)

□ 제4기 위원 명단

구분	기관명	민관협의회 위원	
		직위(직급)	성명
정부 (6)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small>공동위원장</small>
	교육부	차관	최은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여성가족부	차관	정구창
	경찰청	차장	유재성
종교 계 (7)	개신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강석훈
	불교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종봉스님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이명아
	유교	성균관장	최중수 <small>공동위원장</small>
	천도교	사회문화관장	최인경
	천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장	김영선
재계 (2)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	한재훈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명로
노동 계 (2)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 본부장	임영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승일
언론 계 (7)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사무처장	장세찬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한국방송협회	회장	방문신
	한국신문협회	회장	임채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태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허윤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황희만	

구분	기관명	민관협의회 위원	
		직위(직급)	성명
학계 (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안용민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이삼범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김교성
	한국심리학회	회장	최훈석
	한국정신간호학회	회장	한금선
협력 기관 (14)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김숙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김진호
	대한약사회	회장	권영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철주
	생명의전화	원장	하상훈
	생명존중교육협의회	이사장	이주희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김대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호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성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황태연
	한국자살유족협회	회장	강명수
	한국자살예방협회	협회장	이동우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회장	원미라

붙임3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요약)

□ 추진 배경

- 심각한 자살 문제* 대응 위한 특단의 조치 시급, 자살 예방·대응 전략의 획기적 전환과 전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
 - * ▲일평균 39.6명 자살, ▲10만명당 28.3명 자살, OECD 자살률 1위 (‘24)

□ 주요 내용

1] 고위험군 집중 대응

-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자 정보 연계 통해 관리사각지대 해소, △사고발생 시 응급실 동행, 심리지원 등 위기 사례관리 실시
 - * (현행) 경찰·소방을 거친 경우만 정보 연계, 본인이 동의한 경우만 위기개입 가능 (개선) 응급실-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연계 및 즉각 대응 추진
 - △위기 사례관리 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함께 안내해 상담·치료 참여 유인 제고, △응급실 내 ‘위기대응센터’ 확대
 - * (기능)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사례관리 등 실시 (확충 계획) 現 92개소 → ‘25년 내 1개소 추가 → 이후 매년 5개소씩 확충
- **(자살유족)** 유족 대상 심리상담·임시주거 등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치료비·심리검사·상담비 지원 등 추진
 - * 現 12개 시·도 시행 중 → ‘26.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2]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 **(발굴연계)**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상담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 서비스 의뢰·연계
 - * 서민금융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고용부), 범죄피해지원센터(법무부), 가족센터(여가부) 등
 - ** 非전문가도 손쉽게 평가·선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실시 예정
-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 자살예방센터에서 치료·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생활고·가정불화 등 미충족 고충은 유관기관 연계 통해 해결
- **(긴급 대응)** 소방·경찰·응급실 → 자살예방센터 실시간 정보연계 추진
 - * 현재는 전화·수기 등으로 정보연계 중인바, 사건발생↔연계 간 상당 시차 발생

3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활성화

- **(금융)** 소상공인·개인의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소각, 불법추심 피해 방지 위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
- **(생활고)** 긴급 생활안정 지원('25. 4인가구 187만원), 생계급여 인상* 등
* '25년 195.1만원 → '26년 207.8만원(+12.7만원, 4인가구 기준)
- **(범죄·재난피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 유발 범죄 대상 엄정 수사 및 몰수·추징,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 **(대인관계)** △학폭 예방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컨설팅 강화, △가족문제 해결 위한 상담·사례관리 지원 등
* 초 1:2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심의 이전 관계 회복 지원

4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통한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 부여, △본청 내 자살예방과 설치, △자살예방인력 확충* 등
* 자살예방센터 인력 : 現 2.6명 → '26년 5명 → '30년 10명 수준으로 지원(국비 50%)
- **(맞춤형 대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증액(2차 추정 +4억), 매월 자살 빈번·급증지역(10개소) 분석 및 현장 워크숍 지원 등

5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 **(AI 활용)** AI 기반 △실시간 상담 분석 및 고위험군 발굴, △자살 유발 콘텐츠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요청 등
- **(캠페인)** 국가·사회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전 사회적 '생명 존중 캠페인' 추진(2차 추정 +11.3억원)
- **(거버넌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 사무국 역할로서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설치

<참고> 비전 및 목표

비 전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목 표

자살률 감소

'24년 28.3명 → '29년 19.4명 → '34년 17.0명이하
* (5년) 자살자수 '1만명 이하' 감축 * (10년) OECD 1위 옹머 극복

전 략	추 진 과 제
고위험군 집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즉각·긴급 개입 등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02 자살 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 위험군 발굴·연계 강화 04 맞춤형 지원 통한 복합적 고충 해결 지원 05 소방청·경찰청·응급실 연계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 채무·불법추심 등 금융 위기요인 즉각 대응 07 생활고·실업 등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 08 폭력, 고립·은둔 등 대인관계 위기요인 해소 09 중독·재난피해 등 정신적 고위험군 보호 및 지원 10 생애주기별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 11 특수직군·집단별 특화된 정서·심리지원 확대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지자체 자살예방 리더십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 13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및 이행력 확보 14 지역사회 고위험군 발굴·연계 활성화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AI 상담·모니터링 등 과학적 정책 기반 고도화 16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 기반·수단 강화 17 민·관 협업을 통한 인식 개선 추진 18 자살 예방·대응 정책 거버넌스 강화

<참고> 자살 예방 연계 및 협업 체계도

